

최상목, 스콧베슨트 美 재무장관 면담… 관세협상 담판 짓나

최 부총리 오늘 워싱턴DC 출국

22일부터 6일간 IMF 춘계연차총회 IMF서 ‘세계경제전망’ 발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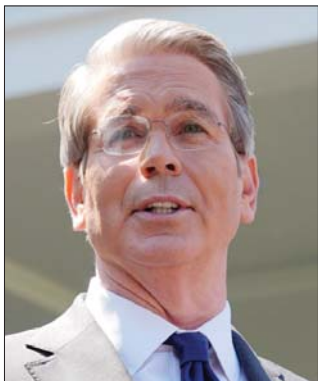
미 재무장관·미 무역대표부 참여 24일 오후 9시 ‘2+2 통상협의’

백악관이 각국을 상대로 불을 지핀 무역 분쟁과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 진단이 주목받게 됐다. 각국 재무장관이 한데 모이는 IMF 춘계 연차총회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번 주 막을 올린다. 한국시간으로 22~27일 엿새간 예정돼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처음 열리는 경제·금융 부문 국제행사이기도 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을 위해 22일 출국한다. 행사 기간 중 스콧 베슨트 미 재무장관의 양자 간 면담이 시선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 재무장관의 IMF 내 면담 성사 여부와는 별도로, 최 부총리는 오는 24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



정부가 이번주 중 미국 측과 통상 문제 관련 고위급 협상에 나선다. 사진은 2+2 통상협의를 참석할 예정인 (왼쪽부터)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슨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뉴시스



께 미국을 상대로 관세협상에 나선다. 장소는 백악관이 유력하다.

연차총회 관련 전 세계의 이목은 우선 IMF가 22일 발표 예정인 ‘세계경제전망’이다. 한국 GDP(국내총생산)에 대한 수정 예측치도 포함된다. 앞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는 한 연설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내려 잡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대폭 하향조정 시사에 대해 진행 중인 관세 전쟁을 이유로 들었다.

총회에서는 고율의 상호관세 부과방

침으로 인한 지구촌 파장을 비롯해, 각국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IMF는 ▲미국발 관세전쟁 불확실성으로 인한 비용 초래 ▲무역 장벽의 증가로 인한 성장 타격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생산성 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각국의 대응책으로는 ▲자국 개혁 노력 강화 ▲가격 안정성을 위한 통화정책의 유연·신뢰성 유지 ▲신흥시장의 경우, 충격 흡수를 위한 환율 유연성 확보 ▲부채 해결 노력 등을 제시했다.

2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미 양국

간 첫 번째 관세협상은 우리 시간으로 24일 오후 9시(현지시간 오전 8시)로 잡혔다.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장관이 미 베슨트 재무장관·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이른바 ‘2+2 통상협의’를 개최한다. 또 2+2 통상협의를 이어 양국 통상장관끼리 개별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안보전략 TF(전담반)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

칙하에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협약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 국민과 언론의 지원 그리고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초당적 협력을 정치권에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우선 협상대상국(5개국-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으로 지정한 이른바 ‘1그룹’ 가운데 일본에 이어 2번타자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다.

미 베슨트 장관은 한국의 경제 수장인 최 부총리를 대화 상대로 지목했다. 이는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사업, 조선업 협력 등 다양한 의제를 테이블 위에 올리겠다는 의도를 풀이된다. ‘패키지 딜’ 형태의 합의점을 꾀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 미국산소고기 월령별 수입 제한 해제, 환율 문제 등도 거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尹 측 “의원 끌어내기 가능해 보이냐” 조 단장 “불가능한 지시 왜 내리느냐”

윤석열 ‘내란수괴 혐의’ 2차 공판 ‘의원 끌어내기’ 증언 두고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기일이 21일 열렸다. 법정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최초로 공개된 가운데, 대통령과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은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리’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속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조성현 단장에 대한 반대신문에 나섰다. 조 단장은 지난 14일 1차 공판의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해당 증언을 언급하며 ‘의원을 끌어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혐의 2차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게 가능해 보이느냐’는 질문을 했고,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느냐’는 질문에는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리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며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답해 방청석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이진우 전 사령관의 지시를 임의로 해석해

부하에게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뒤,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다. 그러나 조 단장은 부하에게 지시한 것이 아니라, 1경비단 전체 임무를 설명해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관련 증언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거듭해서다. 조 단장이 재판부를 향해 “재판장님, 같은 것을 말씀드려도 (계속 질문한다)”고 항의하자 재판부가 “증인 말씀이 일리가 있다. 일관된 얘기는 (부하가) 물어보길래 ‘이런 거’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해줬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거듭 조 단장의 증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위증하면 처벌 받는다. 정확히 말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이날은 첫 공판과 달리 공판 시작 전 언론에 형사대법정 사진 촬영과 영상 녹화를 허용해, 형사 법정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전국민에게 공개됐다.

/서예진 기자 syj@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익 최우선, 양국 윈-윈 방안에 총력”

韓 권한대행, 경제안보전략 TF회의 “美 요청, 양국 경제·통상장관 협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TF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번주 양국의 경제·통상장관이 만나 협의에 착수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주 일본에 이어 이번주 우리나라와 협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미국도 우리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 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균형,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의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협약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EU(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의 협상 동향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협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어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이 쉽지 않은 앎을 것이다. 대미 협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많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이 똘똘 뭉쳐 위기를 기회로, 도전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성장과 번영을 이뤄낸 바 있다. 대미 협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노력, 국민과 언론의 지원,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합동 대표단은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스콧 베슨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협의를 개최한다. 양국 통상장관 간 개별 협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 합동 대표단의 공동 수석대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서예진 기자 syj@

“주가순자산비율 1배 미만 종목 청산해야”

>> 1면 ‘코스피 5000…’서 계속

이어 “이를 위해선 조작이 불가능하고 공시가 투명하며, 규칙이 지켜지는 시장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에 상법 개정을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대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며 “조개지 시장 시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고,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이익으로 환원

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부실 상장 종목 문제도 지적하며 “(주식) 종목 수는 세계 5위인데 시가 총액은 15위다. 이는 실제 가치가 없는 종목이 많다는 함의가 있지 않나”라며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종목은 빨리 청산하는 게 맞다”며 시장 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PBR만 전체적으로 2배 이상 끌어올려도 코스피 4000, 5000은 가능하다”고 덧붙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